

“햇빛소득마을·재생에너지로 지역 소멸 극복”

■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전남 재생에너지 대전환 포럼

전력 생산-소비 불균형...지산지소 전환 필요성 제기 주민 참여 수익모델 주목...정주여건 개선·연계 강조

광주·전남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기반 ‘햇빛소득마을’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현실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국 최대 수준의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갖춘 전남의 강점을 지역 소득과 인구 유입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과 녹색에너지연구원은 22일 여수 유담마리나호텔에서 ‘대한민국 녹색대전환국 제주간’ 광주·전남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제공=영산강유역환경청

이와 함께 태양광·풍력 발전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모델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고효준의 경우 스마트팜과 햇빛소득마을을 결합한 RE100 마이크로그린 하우스를 추진 중이다.

박 교수는 “햇빛소득마을은 단순 발전 사업을 넘어 지역 산업과 결합한 에너지 자립형 수익 모델로 확장 가능하다”며 “가

구조와 수도권 수요 집중으로 장거리 송전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른 계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호남권에 재생에너지 설비가 집중되면서 생산과 소비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해 호남권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7만6161GWh에 달했지만 실제 판매량은 5만4972GWh에 그쳐, 상당량의 전력이 지역에서 소비되지 못한 채 외부로 이동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 교수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산지소(地産地消)’ 기반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구조를 구축함



영산강유역환경청과 녹색에너지연구원은 22일 여수 유담마리나호텔에서 ‘대한민국 녹색대전환국 제주간’ 광주·전남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제공=영산강유역환경청

으로써 송전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지는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햇빛소득마을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요소로 ‘주민 참여’를 꼽았다. 그는 “농지나 저수지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수익을 공동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주민의 공감대와 참여, 운영 역량이 사업 성패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주여건 개선과 연계해 햇

빛소득마을이 지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전력 가격과 제도 변화에 따른 성과 분석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확산 의지를 밝혔다. 조영훈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사무관은 “학교, 전통시장, 산업단지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며 “올해 햇빛소득마을 500곳 이상 신장을 목표로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 투자와 이익 공유 구조를 강화해 참여형 모델을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발제 이후에는 이순형 동신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김명식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조재용 전남도 에너지과장, 노순철 한국전력 광주전남건설사업장 등이 참여해 분야별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핵심 과제와 제기되는 전력망 문제와 지역 수송, 주민 참여형 수익모델을 함께 논의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 맑음 05:51 달맞이 10:36
☁️ 맑음 19:11 달맞이 00:54



광주	☁️	12~22
목포	☁️	11~19
여수	☁️	10~19
순천	☁️	10~20
구례	☁️	10~21
광주	☁️	10~20
신도	☁️	11~20
흑산도	☁️	11~14
고흥	☁️	9~20
진도	☁️	11~18

목포	미물(고)	06:39 / 18:33
	샘물(저)	11:45 / 23:44
여수	미물(고)	01:11 / 13:11
	샘물(저)	07:19 / 19:27

‘교수 갑질, 대학원생 사망’ 전남대에 사과 촉구

민변 등 시민단체...재발 방지 대책도 요구

교수 갑질 의혹 속에 숨진 전남대학교 대학원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광주 시민단체가 대학 측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광주전남지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2일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복지공단 등 지난달 질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급여 지급을 승인했다”면서 “사건의 성격이 명확해진 만큼 대학이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고인의 사망 이후 9개월이 지나지만 대학의 사과와 후속 조치는 여전히 미

흡하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지도교수 중심 구조에서 발생하는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가 시급하다”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유족과 함께 추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전남대 대학원생 A씨 는 교수진의 갑질 의혹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교내 기숙사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도교수와 연구교수 등 2명을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대학 측도 자체 진상조사 등을 통해 관련 교수들을 해임·해고 조치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전쟁 범죄 중단하라” 전남대학교 교수회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전남대분회 교수 170여명은 22일 오후 옹골관 5·18 기념관에서 ‘전쟁 범죄 중단과 국제인도법 준수 촉구’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번 성명은 최근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고인민간인 학살과 인도적 위기에 대해 국제사회가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으며 교수들은 민간인에 대한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올해 5·18 전야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도입

16일 ‘민주의 밤’ 신설...17일 시민난장 등 프로 다채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 전야제 행사가 오는 5월 16~17일 광주 도심에서 열린다. 올해는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야간 프로그램 ‘민주의 밤’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22일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전야제는 ‘오늘 광주, 민주주의 대추제 오월의 꽃, 오늘 빛’을 주제로 16일 5·18민주광장과 금남로 일대에서 펼쳐진다. 시민난장과 민주평화대행진 등 주요 프로그램이 집중 배치되며, 참여형 콘텐트가 대폭 강화된다.

또한 전남대학교부터 금남로까지 이어지는 ‘오늘길’을 따라 주요 사적지를 달리는 체험형 프로그램 ‘RUN 5·18-도청가는길’도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미션을 수

행하며 역사 현장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야간 프로그램 ‘민주의 밤’ 신설이다. 전야제와 일부 성격을 공유하면서도 보다 자유로운 시민 참여형 문화행사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튿날인 17일에는 시민난장 2일 차 행사의 대추제 상징적인 전야제가 열린다. 다만 전야제는 과거보다 시간을 단축해 오후 7시까지 진행된다.

행사와 관계자는 “토요일 중심 프로그램 배치로 시민 참여를 높이고, 전야제는 본래의 역사적 의미를 살리는 방향으로 구성했다”며 “‘민주의 밤’을 통해 참여 방식도 더욱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남부대 특수교사 자격증 발급 중단...“17년 행정착오”

시교육청 “양성과정 아닌 재교육과정, 정교사 1급 불가” 대학원생 “대학 안내 받고 진학” 반발...구제 방안 모색

광주 남부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17년간 발급돼 온 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이 행정착오로 확인되면서 발급이 전면 중단돼 대학원생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남부대 교육대학원 특수교육 전공 재학생과 졸업생 등 34명은 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지 못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교육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부터 해당 대학원 졸업생들에 대한 자격증 발급을 중단했다. 교육당국은 교육대학원 과정이 ‘양성 과정’과 ‘재교육 과정’으로 구분

되며, 정교사 1급 자격증 신규 취득은 양성과정으로 이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된 남부대 교육대학원 과정은 기존 교사의 학위 취득이나 동일 전공 정교사 2급 자격증 소지자의 승급을 위한 ‘재교육 과정’으로, 다른 전공 교사가 특수교사 자격을 새롭게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남부대는 지난 2009년부터 해당 과정을 운영하면서 수강생들에게 특수교사 자격증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광주시교육청

역시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자격증을 발급해왔으나, 신청자가 늘어나자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뒤늦게 제도가 바로잡힌 셈이다.

대학원생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대학 측 안내를 신뢰해 대학원에 진학했으며, 정교사 2급 이상 자격과 일정 교육 경력을 갖춘 뒤 석사 과정을 이수하면 1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고 믿었다는 주장이다.

특히 상당수가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보유한 상태에서 특수교사로의 전환을 목표로 5학기 동안 학업을 이어왔으나, 별도의 유예 기간 없이 자격증 발급이 중단되면서 피해를 입게 됐다고 호소하고 있다.

김진우 기자 joinus@gwangnam.co.kr

양도한 식당서 금품 훔쳐

만년필 ○-자신이 운영하다 양도한 식당에 몰래 들어가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6단독 차기현 판사는 야간 건조물침입 절도·야간건조물침입 절도미수·절도·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2년을 판결.

A씨는 2024년 7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광주 서구 한 식당에 점입, 8차례에 걸쳐 현금 100만원과 26만원 상당의 공구·정소 용구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

식당은 A씨가 운영하다 현 업주 B씨에게 양도된 곳으로 A씨는 종업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출입문 비밀번호로 침입했으며, 주로 밤 시간대를 틈타 절도 행각을 벌였다고.

또 A씨는 지난해 4월 9일 오후 11시 35분 상무지구 인근에서 150m 구간을 횡단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조사 결과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재판부는 “CCTV로 부적절한 행적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탓하는 피해자에게 도리어 화를 내고 맞서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지적.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 남동서 고려~조선시대 매장문화재 확인

광주중건, 광산길 확장공사 중 발굴...자기 등 30점 출토

광주 동구 남동 일대에서 고려~조선시대 생활상을 보여주는 매장문화재가 다수 확인됐다. 도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진행된 발굴조사 결과, 다양한 유구와 유물이 출토되며 지역 역사 연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광주중흥건설본부와 전남문화유산연구원 등에 따르면 동구 남동 99-3번지 일원에서 조선시대 수혈유구와 우물, 건물지 흔적 등 다수의 유구가 발견됐다. 이번 조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도로인 광산길 확장공사에 앞서 매장문



조선시대 4호 수혈유구 출토유물

화재 존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시굴 조사는 2024년 2월, 정밀 발굴 조사는 같은 해 4~5월 진행됐으며 조사

면적은 약 7016㎡다.

확인된 유구는 수혈유구 15기를 비롯해 우물 1기, 적심 1기, 주공열 1기 등이다. 수혈유구는 원형 또는 타원형 평면을 띠며, 백자와 기와 등이 함께 출토됐다. 규모는 최소 55×51×10cm에서 최대 263×216×54cm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주공열은 1열만 확인됐지만, 장방형 형태의 지상식 건물지로 추정된다.

우물은 직경 69~87cm, 최대 깊이 330cm의 원형 구조로, 음성 외곽 민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근대 이후 폐기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당시 생활 기반 시설

의 일면을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된다.

출토 유물은 총 30점으로, 자기류 10점, 우물류 2점, 기와류 18점 등이다. 기와는 고려~조선 초기, 자기는 조선 중기부터 19세기 말까지 제작된 것으로 확인돼 장기간에 걸쳐 재사용된 양상이 드러났다. 특히 사대부 계층에서 사용된 청화백자 접시가 포함돼 눈길을 끈다.

옹기류 가운데 시루와 저부도 출토됐다. 시루는 곡물이나 떡을 찌는 조리용 토기로, 식생활과 외래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다. 연구진은 이 유물이 인근 사찰과 관련된 시설에서 사용됐을 가능

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발굴은 실체가 불분명한 ‘대항사지’ 연구에도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항사지는 현재 ACC 부지 일대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 사찰터로, 11세기 창건 이후 구한말에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남문화유산연구원 관계자는 “이번에 확인된 유구와 유물은 광주유성 및 고려~조선시대 전반의 생활상을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라며 “대항사지와 관련된 실증 자료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